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광주 -3/1℃ 목포 -2/1℃ 여수 -2/2℃
단기 4343년 (음력 11월 28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72호 1판 2010년 1월 12일 화요일

세종시 결국은 블랙홀

광주·전남 신성장동력 태양광·LED 무력화

수도권 규제완화도 불보듯…호남 낙후 가속

정부가 세종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기로 발표하면서 태양광과 LED 등 광주·전남의 미래 먹을거리인 신성장동력이 사실상 무력화하게 됐다.

더구나 세종시는 헐값 토지매입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활용해 기업은 물론 교육·과학분야까지 끌어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수도권 규제완화의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호남권이 국가발전의 성장축에서 장기간 소외될 우려를 낳고 있다. 〈관련 기사 3·4·5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호남권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등 광주·전남의 미래 먹을거리를 통째로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남도는 이날 이상면 정무부지사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종시 5대 거점기능에 태양광과 LED 등 호남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중복된 첨단·녹색기업 육성방안이 포함돼 지역의 신 성장동력이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며 "세종시 수정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특화한다는 애초 취지를 정부 스스로 무시한 것이다"고 반발했다.

또 "정부가 나서 각종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는 사업과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근본적으로 경쟁이 될 수 없다"며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중복된 세종시 안을 배제해 주고 혁신도시 조성원가 인하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 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도 보도자료를 내고 "세종시 발전방안은 광주시의 개발사업과 많은 부분이 상충해 유감"이라며 "광주연구개발특구, 신재생에너지 사업, 광산업 등 지역 역점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어 지역 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투자유치 현장에서는 세종시 수정안 후풍폭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나주 혁신도시 인근에 1천억 원을 투자해 연료전지 신규사업을 추진해 온 GS그룹의 한 계열사가 최근 전남도에 "세종시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문제는 세종시 후폭풍이 지역 산업계에만 그치지 않는다는데 있다. 세종시에 330만㎡ 규모의 과학벨트 거점지구가 조성될 경우 인근 대덕연구단지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과학 및 연구 인프라까지 빨아 들이게 돼 광주과기원, R&D특구 등 지역의 첨단산업도 타격이 불가피 하다.

또 세종시 수정안을 계기로 경기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도 봇물처럼 터질 가능성이 커 자칫 호남권만 발전에서 소외될 우려가 크다.

박종오 전남대 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세종시 과학벨트와 대덕특구가 첨단분야의 연구시설, 인력 등을 빨아들여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한 지역 첨단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장필수·홍행기 기자 bungy@

광주 첨단산단 여전히 황량한데…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인해 광주·전남지역의 신 미래산업 위축이 불가피한 가운데 R&D특구가 들어설 광주 첨단산업단지는 아직 분양조차 이뤄지지 않아 광주과기원 인근 부지가 황량한 상태로 남아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세종시 부처 이전 백지화…삼성·한화·롯데 유치

세종시의 개념이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되고 삼성, 한화, 롯데, 웅진 등 대기업이 유치된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10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기존 계획보다 10년 앞당겨 오는 2020년까지 집중개발되는 세종시에는 재정(8조 5천억원)과 민간(4조5천억원), 과학벨트(3조5천억원)를 합쳐 원안(8조5천억원)의 두 배 가까운 총 16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기업 유치 부문에서는 국내외 5개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LED(발광다이오드), 탄소저감기술 등 녹색산업 분야에 4조5천150억원을 투자, 2만2천994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일단 확정됐다.

먼저 삼성은 165만㎡ 부지에 2조500억원을 투자, 1만5천800명을 고용할 계획이며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LED 등 5개 계열사에 걸쳐 태양광발전, 연료용전지, LED, 데이터프로세싱, 콜센터, 바이오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진출할 예정이다.

한화(60만㎡, 3천44명, 1조3천270억원, 에너지분야), 웅진(66만㎡, 2천650명, 9천명, 웅진케미컬·에너지 통합연구센터), 롯데(6만6천㎡, 1천명, 1천억원, 롯데식품연구소), SSF(오스트리아 태양광제품 업체, 16만5천㎡, 500명, 1천380억원)도 입주계획을 밝혔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해 인근 대덕, 오송, 오창 등과 연계된 연구거점 330만㎡를 조성하고, 내년부터 2015년까지 3조5천억원을 들여 세종국제과학원을 설립해 그 산하에 중이온가속기, 기초과학연구원, 융복합연구센터, 국제과학대학원을 갖추기로 했다.

대학의 경우 고려대와 KAIST가 각각 100만㎡ 부지에 6천12억원과 7천700억원을 투자해 대학원과 연구기능 위주의 대학을 운영하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또 큰 눈

13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 최고 15㎝에 이르는 폭설과 함께 강추위가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은 12일 오전부터 눈이 내릴 것"이라고 11일 예보했다. 눈은 13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남해안을 제외한 전남지역과 광주 5~15㎝, 전남 남해안 지역 3~8㎝ 등이다.

기상청은 12일 밤을 기해 광주와 함평, 영광 등 전남지역 12개 시·군에 대설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영상 2도로,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15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형호기자 khh@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조선대 이사 2명 선임 법리논쟁

교과부 "정원 9명 중 결원자 충원 우리가 하겠다"

조선대 "이사회 이미 정상화, 교과부 월권 말라"

지난해 말 22년 만에 학원정상화에 성공한 조선대학교가 주춤거리고 있다. 정상화를 계기로 제2조선대 병원 건립 등 새로운 도약에 나서려 했으나, 이사진 구성이 끝나지 않아서다.

11일 조선대에 따르면 범조선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학자치운영협의회, 민주동우회 등 조선대 구성원들이 최근 이사 총정원 9명 중 결원인 이사 2명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종전 이사(옛 경영진)인 정애리시·박성섭씨의 추천 인사를 선임할 것으로 알려지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조선대 이사회가 구랍 31일 7명의 이사로 출범해 대학이 정상화된 만큼 사립학교법과 조선대 정관에 따라 결원 이사 2명은 교과부가 아닌 이사회가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대는 이날 "이사회 출범은 곧 대학 정상화를 의미하고, 정상화 이후 대학 관련 사항은 이사회에 권한이 있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면서 "교과부가 결원 이사 선임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성섭씨는 교과부가 사학분쟁조정위원들을 상대로 한 형사고발(업무방해 등)을 취소할 경우 자신이 추천한 이사를 선임해주겠다고 약속, 이를 믿고 고발을 취소한 만큼 추천 이사 2명을 곧바로 선임해 줄 것을 교과부에 촉구하고 있다.

조선대는 이사회 발족을 계기로 민립대학에 걸맞은 장학정책 및 학생 등록금 인하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장기발전계획, 제2조선대병원 건립 등의 마스터플랜에 대한 최종 확정과 착수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한편 조선대는 1987년 문교부의 종합감사로 학교운영 부실, 교수 구타, 신·편입생 부정입학, 교원 신규채용 부적정 등 40가지를 시정 조치토록 지시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1988년 이사 9명 전원의 취임 승인이 취소되고, 임시이사가 파견됐었다.

이후 2006년 4월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해소됐으므로 정상화방안을 제출하라는 교과부의 요청에 따라 조선대는 정상화방안을 마련, 결국 구랍 31일 정상화를 이뤄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